“기다림에 바닥… 때 되면 말할 것”

이낙연 전 총리, 신당 창당설 관련… “할 말 하는 당내 민주주의 복원 시급”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민주당 정체성 위반”… 제3지대 취지 공감 나타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는 4일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기다림에도 바닥이 났다.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제3지대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위기 중 핵심적 정치위기는 신뢰받지 못한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보니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걸 저지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이 있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제 인생의 걸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제3세력 중 기대감과 눈높이를 맞춘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엔 “제가 얘기하면 큰 뉴스가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믿을 만한 사람 모시고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고 상당 부분이 문제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에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양당이 모두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노력을 해야지 선택의 여지를 짓밟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 새로운 비전을 가진 분. 양자택일에 너무 속박돼 있지 않은 분들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차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이 승리의 길인가 잘 판단하고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마치 당을 압박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도 “총선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좋은지 아닌지는 당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데 대해선 “위기 의식을 가지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저의 기다림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다”며 “효과가 없겠지만 도리로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수십년 동안 내부의 다양성과 당내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있어서 큰 병에 걸리지 않고 회복을 했는데 지금은 그 면역체제가 무너졌다”며 “누구든지 할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권이 야당의 약점을 안다면 그 야당을 무서워하겠냐”며 “정권이 무서워하는 야당이 되려면 야당 스스로 떳떳해져야 한다. 검찰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야당 스스로에 대입하면 금방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어떤 것이 민주당 지지도를 억누르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점해도 왜 반사이익을 못 받는지를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 깨면 된다. 달걀을 안에서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밖에서 깨면 프라이가 된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정체성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윤석열, 이재명 두 분 중 한 분만 골라라 하는 시험 문제가 작년 대선부터 계속 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30% 가량이 ‘정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선거 결과는 양당이 나눠먹기로 간다면 민심과 선거 결과는 멀어지고 정치는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은) 공학적으로 비례대표에서 몇 석이 손해 볼 것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잃는 것까지 합쳐서 계산해 보면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손해다 금방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너무 공학으로만 보지 않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민주 혁신계 연쇄 탈당 가능성?

이달 중순 ‘분수령’

원칙과 상식 “혁신안 들어주지 않으면 최종 결단”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사법리스크 연일 직격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혁신계) 의원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거취와 관련 당에 변화가 없으면 이달 중순 이후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5선 이상민 의원이 탈당과는 거리를 뒀지만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맞물려 연쇄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칙과 상식’ 소속의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의 혁신안 수용 여부에 따라 연말께 거취를 결단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출범 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12월까지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 비전 정치 회복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도부의 답변 시한으로 이달 중순을 제시했다.

‘원칙과 상식’은 전날 간담회에서 “당이 (혁신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최종 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 탈당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해법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독자 노선을 택한 이 의원의 행보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추가 탈당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원칙과 상식은 10일에는 당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당원들을 모아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비주류 혁신계 당원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세를 불리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비명계의 행보는 이낙연 전 대표(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일 저격하는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 평균만큼은 정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국면에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결론이 난다면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는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지난달 26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추가 탈당 가능성은 다고 보면서도 비명계의 세 결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최근 두 달여 동안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두 차례 만나 당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만남에선 친낙계인 윤 의원이 배석했고, 원칙과 상식 측도 김 전 총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 전 총리는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도부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인터뷰가 정치 재개 선언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기여할 상황이 되면 움직이겠다”며 역할론을 부인하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이낙연·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반명(반이재명)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시스

윤수봉 도의원,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 조례 발의

전북도의회 윤수봉의원(완주1)이 ‘전라북도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총 다섯 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웅치?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중심으로, 전적지 발굴 및 조사와 보존 및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웅치?이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지상에서 벌어진 전투 중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관군은 물론 의병과 양민들이 참여해 치열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숭고한 호국보훈의 유산을 남겨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역사적 평가에서 소외되어 왔고 심지어 승리의 역사가 패배의 역사로 뒤바뀌어 기록되는 역사적 왜곡마저 있었다. /김재훈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정 문제와 당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학규 “연동형 유지 힘 모아야”

이재명 병립형 시사에 “정치적 대결구도 심화시키는 후퇴”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고 시사한 것에 대해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처절한 후퇴”라고 밝혔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연동형 비례제의 실질적인 유지를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이 정치 목표라고 해서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되지만, 나라가 어려운 때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사법리스크에 웅크려진 당을 살리느라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특검으로 공격을 퍼붓지만 민주당은 당의 자존심과 긍지, 지도자의 체면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여당도 과반 의석을 꿈꾸기 보다는 국회 내 연립 정권으로 정치적 안정을 기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행히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했다”며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과 같은 당의 분위기에서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제출된 법안 내용을 보면 이 정도로는 연동형을 빠져나갈 구멍이 크게 뚫려있어서 걱정스럽다”며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하나도 내지 않고 비례후보만 당선시켜 국회에 진입하고 나중에 결국 거대정당과 합당한 사실상의 위성정당이 많은데 이러한 폐해를 바로 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 고문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도를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만큼 약속을 지키는 대표,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돼 달라”며 “민주당에 대한 자존심, 긍지를 잃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호국 보훈수당 동일 지급 방안 강구”

도의회 예결특위,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등 대상 예산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는 4일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영계획안 및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3일차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녹지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교육소통협력국 등 5개 국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벌였다.

먼저,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여성가족과 소관 ‘전북여성가족재단 운영’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 묻고, 산출내역에 기능 보강을 위한 내역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돌봄과 장애아 지원 사업 인건비 산출내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등 사업내용과 국비로 미지원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인건비가 6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또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사업과 관련해 타시도는 국비외 자체적으로 출생아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출산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출산율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증액한 사유와 공로보훈 수당이 전국 대비 하위권인 사유에 대해 묻고, 보훈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로 전국 수준으로는 지원되어야 되고, 특히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선별검사와 관련하여 검사 방법과 주기에 대해 묻고, 지하수 사용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은 보건의료과 소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과 관련해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묻고, 국가적으로 마약문제가 대두되는 추세로 앞으로 더욱더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시범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이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1)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65세 이상 노인 자살인구가 전국 대비 높은 이유에 대해 묻고, 자살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살인구 감소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토피천식 사업과 노인복지관 사업에 대해 14개 시·군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복성이 있고, 도는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용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진안)은 호국 보훈수당 관련 14개 시군이 수당지급액이 다른 이유와 시군별 협의를 통해 조율할 방법에 대해 묻고,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시설규모와 수용인원에 대해 묻고, 전담인력 1명이 30여명의 노숙인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한경봉 군산시의원 모범 의정상 수상받아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1·2동)이 시민단체로부터 ‘모범의정상’을 받았다.

4일 군산부패조사단(단장 유영근)은 2023년도 의정활동에서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군산시의회 위상을 높여 군산시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상장을 수여했다.

한경봉 의원은 제4~7대 군산시의회 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제9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2회 모범의정상에 이어 제3회 모범의정상까지 2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산=김관곤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교세 82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소식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각 군별 주요 사업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10억원), △무주군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13억원), △장수군 번암 죽림교 재가설 공사(11억원) 등이다.

군별 전체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4억원),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총 22억원이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과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교부세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확보했다.

무주군 또한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원과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 7억원 등 마찬가지로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다.

장수군 역시 20억 원을 확보해 △번암 죽림교 재가설 공사(11억원)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2억원)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2억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2억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3억원) 등을 추진하게 됐다. /무주=전문선 기자